

 금융위원회	보도참고자료				• 생산적 금융 • 신뢰받는 금융 • 포용적 금융
	보도	배포 시	배포	2018.12.8.(토)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송 현 도(02-2100-2530)		담 당 자	박 정 원 사무관 (02-2100-2531) 최 민 혁 사무관 (02-2100-2534)	

제목: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 제정안 및 핀테크 지원 신규예산 국회 본회의 의결

- ◆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**新금융서비스**에 대해 **규제특례**를 부여하는 **금융분야 규제 샌드박스 도입의 법적 근거 마련**
- ◆ 핀테크 지원 사업을 위한 **신규 예산 79억원을 통해 금융테스트 베드 운영 내실화, 핀테크 기업 맞춤형 지원 추진**

1 개 요

- 정부는 그간 핵심 국정과제인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일환으로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해, 규제샌드박스 도입과 함께 핀테크 예산 지원을 추진해 왔음
- 민병두 의원이 '18.3.6일 대표발의한 「금융혁신지원 특별법」 제정안이 '18.12.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*하였음
 - * (11.28) 정무위 → (12.5) 법사위 → (12.7) 본회의
- 이와 함께, 핀테크 지원 사업을 위한 '19년도 신규예산 79억원도 금일 본회의에서 확정되었음
- 금일 본회의 통과로 글로벌 핀테크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핀테크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틀 구축이 연내 마무리
 - 핀테크 기업의 새롭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시험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
 - 인적·물적 자원이 영세한 핀테크 업체에 대해 정부 예산으로 종합적·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음

□ 특별법 제정으로 新금융서비스의 실험 근거를 마련하여 핀테크 활성화, 금융권의 경쟁과 혁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

- 혁신성이 높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여 시장테스트를 위해 필요한 규제특례를 부여함에 따라 법적 제약 해소 근거 마련

<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운영 절차 >



□ 예산안 확정으로 핀테크 업체가 新금융서비스 실험에 보다 쉽게 나설 수 있도록 핀테크 업체의 자금 부담 완화 기대

- 테스트베드 비용 보조금 40억원*, 멘토링·컨설팅 등 맞춤형 성장지원 19.1억원, 핀테크 박람회** 8.2억원 등으로 구성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이 가능해짐

* 금융테스트베드 참여기업의 테스트비용의 75%(나머지 자비부담)를 1억원 한도내 지원

** 데모데이, 청소년 등 핀테크 체험,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 등을 함께 실시

< '19년도 핀테크 예산 주요내역 >

세부사업	금액(억원)	주요항목
① 테스트베드 운영 및 참여지원	48	· 금융테스트 비용 지원 40억원
② 맞춤형 성장지원프로그램 운영	19	· 업무공간 및 멘토링 제공 6.5억원 · 맞춤형 교육 4.2억원 · 해외진출컨설팅 6.8억원
③ 국제협력 강화·국제동향 연구	2	· 국제동향연구 0.9억원 · 해외 감독당국과 셔틀미팅 1억원
④ 국민참여 핀테크 체험 행사	9	· 핀테크 체험 박람회 8.2억원
합 계	79	

- 핀테크 지원을 위한 틀이 마련되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'19년이 핀테크 활성화가 본격화되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정책 추진
- 핀테크 기업과 이용자가 혁신금융서비스를 조기에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 하위법규 입법예고 절차를 연내 마무리
 - '19.1분기 법률 시행(공포 후 3개월), '19.2분기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목표로 관련 절차를 조속히 추진*할 예정
 - * 추진 일정(잠정) : (12월말)법률 공포, 하위법규 입법예고 → ('19.1월)부처협의 → (2월)규제위법제처 심사 → (3월말)법률 및 하위법규 시행
- 핀테크 예산 수혜대상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위해 핀테크 예산 집행계획을 12월중 발표 예정
 - 또한, 향후 핀테크 박람회 개최, 테스트베드 제도 운영 등 예산관련 사업 진행 상황을 보도자료 배포 등 지속 공개 예정
- 특히 규제샌드박스 제도 및 핀테크 예산을 원활히 집행하고 핀테크 확산을 위해서는 시장 참여자와의 상시적인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만큼,
 - 핀테크 정책 수립, 관련 규제 혁신 등을 위해 핀테크, 금융회사, 전문가 등과 의사소통 강화 추진
 - 간헐적인 협의회보다는 정례적 만남의 자리*를 마련하여 업계 건의 수렴, 정책소개 등 지속적인 대화와 소통 추진
 - * 매주 고정된 날짜(잠정, 금요일 조찬)에 상시적으로 실시하되, 필요한 경우 핀테크 지원센터, 핀테크 기업, 금융회사 등 현장 방문을 통해 실시
 -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 및 과장 등이 직접 참여하고, 금융위·금감원, 기재부 등 관련 업무 담당자도 함께할 예정

참고

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안 주요내용 (법사위 통과안)

※ 정무위 논의 시 주요 수정사항

- ① 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이 '입증책임 전환'으로 수정
- ② 이용자에 손해 발생시, '징벌적 손해배상' 조항 삭제
- ③ 혁신금융사업자의 배타적 운영권 최대 기한이 당초 1년에서 2년으로 연장
- ④ 혁신심사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25인 이내로 확대

가.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: 규제 샌드박스

1]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

- (신청자격) 핀테크 기업(상법상 회사)과 금융회사(제5조)
- (신청 서비스)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·방식·형태 등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(이하 '혁신금융서비스')(제2조제4호)

2] 혁신금융서비스 심사·지정

- (심사·지정 주체)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되, 산하에 혁신금융서비스의 심사를 위한 '혁신금융심사위원회*' 설치(제13조①)

* [위원장] 금융위원장 [위원] 금융위 공무원, 관계부처 차관, 기술·금융/법률/소비자 분야 전문가(각 분야 1인 이상 포함)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로 구성(총 25인 이내)
(위원수 : 원안은 15인 이내 였으나, 정무위 논의 시 25인 이내로 확대)

-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신청자,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청취(제15조)

- (심사기준) ① 서비스의 혁신성 ② 소비자 편익 증대여부 ③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적용의 불가피성 ④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⑤ 금융소비자보호방안의 충분성 ⑥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(제13조④)

3]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과

- (규제특례) 지정받은 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례가 인정된 해당 금융규제는 적용되지 않음(제17조①)
 - 인허가·등록·신고, 지배구조·업무범위·건전성·영업행위, 사업자 감독·검사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특례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
- * 타 부처 소관 법령의 규제특례는 법령 소관부처의 동의를 받아 지정
- (특례 제외대상) 다만, 소비자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 우려, 금융질서 안정성 저해 우려 등이 있는 경우, 특례인정 불가(제17조②)

4]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보호

- (감독·제재) 테스트 환경에 적합하게 구성된 특별법 규정* 적용(제7조, 제29조, 제33~35조)
 - * 예 : 지정내용을 벗어나서 테스트를 실시한 경우 지정취소, 형사처벌 등 제재
 -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, 금융시장 혼란 우려가 있을 경우 지도·시정
 - 소비자 피해 발생 등 비상상황시 중지명령, 변경조치(제11조)
 - (소비자보호방안 마련) 사업자에게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방안이 충분한 경우에만 테스트 허용(제13조, 제19조)
 -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시 소비자보호 방안* 등을 함께 제출
 - * 이용자의 범위 제한, 거래위험 고지, 분쟁처리 절차 마련 등
 - (소비자 권리구제)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용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(입증책임 전환)하고 사업자의 배상 여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이행 보장장치 마련(제27조)
- ※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조항은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

-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,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배상 책임을 부담하나,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, 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(입증책임 전환*)(제27조①)

* 민사소송원칙에 따르면 손해배상요건을 충족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나, 입증책임 전환 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사업자가 입증 필요

※ 당초 의원안은 무과실배상책임을 규정하였으나, 정무위 논의 시 산업융합법, 지역특구법 등 여타 규제샌드박스 법안과 동일하게 '입증책임 전환'으로 수정

- 사업자에게 배상책임 이행을 위한 보험 가입 의무화(제27조②)

5] 테스트 종료후 후속조치 : 검증된 서비스의 시장 안착 지원

- (지정효과 실효) 테스트 기간(최대 2년 이내에서 지정시 결정) 종료시 규제특례는 원칙적으로 종료*(제9조)

* 기타 종료 사유 : 지정 취소, 합병 등으로 인한 조직변경, 자진철회 등

- 다만, 필요성 인정 시,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가능(제10조)

- (시장안착 지원) 인허가 심사 지원 및 제도개선 신속 추진

- 테스트기간 중 인허가 또는 등록요건 일부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의견제시 등을 통해 심사 절차 지원(제21조②)

- 시범서비스의 정식 시장출시를 위해 관련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혁신심사위원회가 입법조치 권고(제13조⑤)

- (배타적 운영권) 혁신금융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후 최대 2년 이내에서 다른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음(제23조)

※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최대 2년으로 연장 (의원안 : 1년)

나. 기타 제도 : 지정대리인 제도, 규제신속 확인제도

① 규제신속 확인제도 (제24조)

-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융위에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등*의 적용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

* 법령, 행정규칙,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

- 금융위는 소관 법령 등에 대해서는 직접, 다른 행정기관 소관 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 신청인에게 회신

* 특히, 그간 타부처 소관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았으나, 금융혁신법 제정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짐

② 지정대리인 제도 :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(제25조)

- 금융위는 서비스의 혁신성, 소비자 편의 등이 인정되는 경우 서비스를 테스트하려는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

-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의 테스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정대리인에게 본질적 업무 위탁 가능

- 금융회사는 업무위탁자로서 수탁자인 지정대리인을 관리·감독하여 이용자 피해 및 위험발생 방지

다. 혁신금융서비스 예산 지원 근거 마련

-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을 통해 핀테크기업 등에 대해 지원될 수 있도록,

- 정부가 예산 등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제26조)